

“살기좋은 ‘명품 고창’ 실현할 것”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
민주 입당... 고창군수 출마선언
노을대교 건설·기업 유치 등
고창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아
“내년 대선서 당 압승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강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1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았다.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전북 고창군수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전 차장은 11일 전북도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고창군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결심을 굳히고 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오늘 입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전 차장은 고창군수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창군민으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에 보답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그간 축적해 온 풍부한 행정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고창 발전에 쏟아 부어,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살기좋은 명품고창을 실현하고자 출마 결심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 전 차장은 노을대교 건설과

산업단지 기업 유치 등을 고창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심 전 차장은 “현 군수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고창군 발전이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고창 군정과 도정, 정부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 돼 고창군 발전을 이끌어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 심 전 차장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고창군수 민주당 후보 당내경선에 대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면서 “고창지역 주민들에게 심

덕섭을 널리 알리고, 고창발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준비된 고창군수 후보자로서의 행보를 본격 개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윤준병 지역위원장, 군도 의원 등과 함께 뜻을 모아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덕섭 전 차장은 영선중·고창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영국 버

밍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청와대 선임행정관,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및 지방행정실장, 국가보훈처 차장 등 중앙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근에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민주당 입당과 출마준비를 위해 위원장직을 지난 2월 사임 했다. /유호상 기자

“탄소산업 잠재력 일찍 인지”

‘당권 도전’ 민주 송영길 의원, 탄소진흥원 방문
“탄소산업으로 늘어나는 근로자들 전복에
뿌리 내리도록 ‘누구나집 프로젝트’ 도입해보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1일 전북을 방문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컨트롤러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탄소산업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다른 민주당 대표 후보와 달리 탄소산업의 현장을 찾은 송영길 의원은 방문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초대 원장과의 오랜 친분을 소개해 시선을 모았다. 송 의원은 “인천시장 재임 시절부터 알고 지낸 방 원장을 통해 전락산업으로서 탄소산업의 잠재력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전북 탄소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했다. 실제로 송 의원은 철강을 대체하는 미래소재인 탄소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공부를 거듭해 적지 않은 관련 지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송 의원은 15만 평 규모 탄소산업 단지에 100개 기업 유치와 1만 여명 고용이라는 전북의 목표

에 공감하며 “탄소산업으로 늘어나는 근로자가 전북에 뿌리를 내리고 편히 살 수 있도록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도입해보자”는 의견을 전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보유하고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망 사업으로 송 의원은 당대표가 될 경우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송 의원은 2030년까지 1,600개 기업 유치, 5만명 고용, 50조 매출을 목표로 한 탄소산업 육성 비전 실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세계적인 아이돌 BTS의 팬클럽 ‘아미(ARMY)’ 회원이기도 한 송영길 의원은 BTS의 제작자인 방시혁 대표와 방원혁 원장이 친인척인 점을 언급하며 “방원혁 원장이 방시혁 대표처럼 전북탄소산업을 세계탄소산업을 BTS로 키워주길 바란다”는 덕담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이날 전주 방문을 시작으로 남원, 임실, 순창, 방문 일정을 진행하고 12일은 부안, 고창, 김제, 부안, 익산, 군산 등 전북 전역을 돌며 현지의 민심을 직접 경청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도·도의회·비전대,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 ‘앞장’

소방관 맞춤형과정 개설 협약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전주비전대학교가 11일 오전 도의회에서 ‘수요 맞춤형 드론직무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추진학 선도형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와 전북도, 전주비전대학교가 전북형 뉴딜산업과 연계해 전북지역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소방관 맞춤형 드론직무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에 들어간다. 송지용 의장과 문승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용근 의원과 최훈 행정부지사, 홍순도 전주비전대총장 등은 11일 오후 도의회에서 ‘수요 맞춤형 드론직무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추진학 선도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회와 전북도, 전주비전대는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개발과 지원을 위한 산·학·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우선 소방관 드론직무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산업으로 탄소·수소산업 등과 연계한 전북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과 인력양성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은 “소방뿐 아니라 농업과 산림 지적 등 드론활용성이 매우 크다”며 “우선 소방분야 드론직무교육으로 협약을 시작하지만 앞으로 세 기관의 산학관 거버넌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탄소와 수소산업 기반이 선도적으로 갖춰져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자리해 드론산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인력양성에도 힘을 써 전북에 청년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 도 행정부지사는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드론사용교육 협약을 맺게 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전북도의 뉴딜안전망구축사업과 연계해 드론활용 및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순도 전주비전대총장은 “전주비전대에 드론학과를 개설하게 됐다”고 소개하며 “대학과 학과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 및 기관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역 청년 여성들의 정치적 역량강화 모색

전북연구원, 포럼 개최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이수인)가 ‘청년여성 정치세력화 방안 포럼’을 11일 개최했다. 이 포럼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의 2021 성평등추진 전략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이날 포럼은 이수인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지소 연구원은 “청년 여성들을 위한 각 정당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의 변화와 여성비율을 고려한 청년할당제, 여성의원 할당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한솔 진보당 활동가는 “청년여성으로서 자신이 지역에서 펼치는 정치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며, 느낀 어려움을 토론했다.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원은 “여성정치인에 대한 폭력 방지 활동과 함께 여성의 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나 내각에서 남녀동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은주 대전시의원은 “정당 내 청년 여성들의 풀뿌리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도, 시·군 ‘도시재생사업’ 방향 공유·가속화

생태문명·도시재생 뉴딜 접목 사업 발굴 간담회 열어

전북도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 주요 정책인 ‘생태문명’을 접목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중 사업 가속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와 시군은 현재 시행 중인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정 주요 정책인 ‘생태문명’을 접목하는 사업의 발굴 방안, 현재까지 선정된 41곳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도 주택건축과와 시·군 담당과장, 전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췄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토부 신규 공모 선정 방향이 주거지 공공 문제 해결에 집중돼 있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전북도 특색에 맞는 도농상생, 생활인프라 복원 등 생태문명 지역 특화 개념을 접목해 공모 사업 선정과 향후 사업 효과 거양을 동

시에 거둘 수 있도록 합을 맞췄다. 국토부의 변경된 정책 및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 유형도 공유하고, 올해 공모 예정인 사업에 다수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생태문화라는 관점에서 현대적 유산으로 재탄생시킨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사례와 같이 도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도시재생으로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의 생태적 접근방법(Urban Regeneration: An Ecological Approach)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회를 이어갔다. 또한, 전북도는 올해가 도시재생 뉴딜이 추진된 지 5년차 되는 해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전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배경된 예산의 전액 집행을 위해 착·준공 일정을 조속화하고, 부지매

입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시·군 개별 사업에 대한 전북도와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담관을 배정해 집중 관리하고, 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혜택과 별점 부여를 강화해 시·군에서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형수 도 주택건축과장은 “전북도 뉴딜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생태문명의 메카인 전북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생태적 도시재생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피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민주 이원택 의원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건의문 대통령 “여야 합의시 지급” 화답

원내대표단 간담회 자리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이 지난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의 간담회에서 “농어민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건의한데 대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화답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의 간담회에서 “농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꾸준히 제기해 온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건의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농업기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설계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농업재해보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 여야 간 의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라고 화답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이원택 의원의 요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의원은 앞서 이낙연 전대표와 함께 농민단체 간담회를 갖고, 농어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민주당의 공감과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정세균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등을 만나 꾸준히 설득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과 관련해, 이원택 의원은 “문재인 대

통령선 평소 농업의 생산과 정주여건 개선,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시다. 이번 결정도 그 뜻이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추경안 등의 단계에서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간담회는 2020년과 2021년 원내활동을 공유하고, 국회운영 관련 입법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1월 이원영 원내대표단이 이끄는 원내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뒤 1년 2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을 전후해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져왔으나, 지난 연말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 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 김용민·윤건영·이원택·홍성국 부대표 등 18명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이 참석했다. /유호상 기자

靑 “비서관급 이상 368명 조사...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없어”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에 대한 토지거래 거래내역 1차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접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은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강염병 의심되면 '1339'로